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7드단204960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원 고	갑 (1986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을 (1980년생, 남)	
	주소	
	등록기준지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 서기가 2014. 4. 11. 제출한 혼인증서등본에
기하여 2014. 4. 25. 전라북도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국 0000주 공중보건부에서 2015. 6. 3. 제출한 협의이혼증서
등본에 기하여 2015. 6. 17. 전라북도 **시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미국 유학 중 2014. 2.경 *** 한인모임에서 피고를 알게 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신이 미국에 좀 더 체류할 수 있도록 비자연장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원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 사실, 이후 원고가 혼인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미 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이용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혼인신고(이하 '이 사건 혼인신고'라 한다)를 마쳐 버린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4. 2.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인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이용하여 원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약 3788)되어 2017. 8. 7.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이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피고의 비자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

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이혼신고 또한 이 사건 혼인신고가 무효인데다가 이혼에 관한 원, 피고 사이의 합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